

 국토교통부		<h1>보 도 자 료</h1>	
		배포일시	2018.8.6(월) / 총2매(본문2)
담당 부서	자동차정책과	담 당 자	•과장 박대순, 사무관 유연형, 주무관 황우관 •☎ (044) 201-3843, 3844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국토부, BMW측에 차량화재관련 철거조치 엄중 요구

- 대국민 공개 설명회 개최 후 제출자료는 공개적으로 검증 -

- 국토교통부는 BMW 코리아 대표 및 본사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화재사고에 따른 리콜과 관련하여 BMW측에 자료제출이 미흡한 점을 언급하였고,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는 등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였다.
- 또한, 현재 진행중인 긴급안전진단 및 화재발생 원인규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국민들께 CEO등 최고책임자가 충실히 설명하도록 요구하였다.

첫째, 이번 BMW 리콜대상 차량(42개종 106,317대)의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리콜 지연사유

둘째, 현재 진행중인 긴급안전진단과 관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부실 안전진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집행

이와 관련하여 화재 원인규명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 제출된 기술근거자료, 리콜대상 산정근거, 원인분석 보고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판단한 근거자료, EGR 리콜관련 분석자료 등 추가적인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신속 제출

셋째, 안전진단 후에도 부품교체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리콜 단축대책을 제시

넷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가솔린 차량의 화재발생에 대한 입장 및 대책을 제시

다섯째, 불안한 차량 소유자 등 소비자에 대한 보상 등 피해 구제 대책을 조속히 마련

- 국토교통부는 이번 BMW에 대해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화재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국내전문가를 충분히 참여시켜 화재 발생 원인 규명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또한, BMW측의 조치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 및 리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철저한 원인규명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리콜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자동차정책과 유연형(☎ 044-201-38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